전남도, 올 토목공사에 1조2000억 푼다

호남고속철 2단계 600억 경전선 전기공사 2000억 연륙·연도교사업 2900억 국도 확·포장 등 4800억

올해 전남도가 철도·고속도로·국도·지방도 사업, 연륙·연도교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 업 등 토목공사에만 1조2000억여원을 투입한 다. 경전선 광양~진주 간 전기공사, 호남고속 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등 대규모 사업들이 시작되면서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 에 따라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최근 확정된 전남도의 2015년 건설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궤도·전기공사, 기본설계)에 600억원을 시작으로경전선 광양~진주 간 전기공사(2000억원)·목포~보성 터널공사(52억원), 광주~완도 간고속도로 건설 실시설계용역(100억원) 등 모두 1조2219억2000억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건설사업들을 추진한다.

또 여수와 고흥을 잇는 적금~영남(311억원), 화양~적금(597억원) 등 19개 지구에 연륙·연도교 건설을 위해 올해 2902억원이 쓰일예정이다. 돌산~화태(233억원), 압해~암태(547억원), 신지~고금(188억원), 영광~해제(197억원) 등도 포함됐다. 화태~월호 등 7개

지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도 확·포장 및 우회도로 32개 사업지구에는 모두 30.7km의 도로를 놓는데 4846억원을들인다. 국도 확·포장 29개 지구에 4155억원, 국도 우회도로 3개 지구에 69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전남도는 도서 및 해안의 접근성 향상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수~영광 간 국도 77 호선의 조기 건설과 함께 지역 간 연결 간선도로망 조기 확충에 노력할 방침이다.

국가지원 지방도 11개 지구에는 공사비 761 억원, 보상비 961억원 등 961억원이 투입된다. 앵남~화순(102억원), 송현~남평(37억원) 등 2개 지구는 올해 준공되며, 화양~나진(155억 원) 등 8개 지구는 계속 사업, 종군~진상(5억 원)은 신구사업이다.

지방도의 경우 19개 지구에 700억원이 2015년 예산에 포함됐다. 엄다~자풍 등 4개 지구는 112억원을 들여 올해 준공하며, 도암~유치 등 13개 지구에 581억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순천~월등 등 2개 지구에 7억원이 각각 쓰인다

영암 여운재 등 위험도로 6곳에는 올해 58억 2000만원이 투입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모든 공사들이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신 규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 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택시 1978대 어떻게 줄이라고…

전남도, 국토부 감차 용역 결과에 곤혹

전남도 22개 시·군의 적정 택시 대수가 5082대로 분석됐다. 현재 706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1978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택시총량 용역결과가 타당한지를 국 토교통부에 재검증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에서 제3차 총량제 실시에 앞서 실시한 용역 결과 2015년부터 5년간 2000대에 가까운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2013년 29대, 2014년 33대 등 매년 30대 안팎의 택시를 줄이는데 그쳤던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수치다. 전남도는 도시와 농촌을 똑같은 기준으로 분석하고, 특히 전남도의 대표 교통 정책인 '100원 택시' 도입 등 신규 수요를 감안하지 못했다고 반바하고 있다.

공식 감차 보상비(대당 1300만원)의 70%를 부담해야 하는 시·군들도 난색이다. 1300만원에 택시를 내놓겠다는 신청이 없어 '웃돈'으로 500만~700만원 이상을 보태고 있어 택시 감차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군 가운데 목포가 1551대(개인 929대 법인 622대)로 가장 많고, 곡성군이 82대(개인 46대 법인 43대)로 가장 적다. 특히 법인택시회사 가운데 소유 대수가 1~4대에 불과한 '극소업체'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5대 미만 업체는 여수 3곳, 나주 7곳, 광양 2곳, 담양 9곳, 곡성 8곳, 구례 4곳, 고흥 8곳, 보성 6곳, 화순 2곳, 장흥 4곳, 강진 8곳, 해남 3곳, 영광5곳, 장성 4곳, 완도 7곳, 진도 3곳, 신안 9곳 등이다.

이들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전남의 법인택시업체는 250곳에 이르고 있다.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013년 목포·여수·순천·광양이 2300원에서 2800원으로, 나주 등 나머지 시·군이 2500원~3000원에서 3000원~3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요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산하기관장 청문회 업무협약

첫 대상은 내달 선임 DJ센터 사장

광주시 산하 주요 공기업과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회가 본격 시행된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공사·공단 등 주요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 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른 청문 대상 기관은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 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공사·공단 4곳과 빛 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신용보증 재단 등 출연기관 4곳 등 총 8곳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윤장현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인 산하기관 혁신과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 의지를 재확인했다는데 의 의가 있다고 광주시는 자평했다.

청문회 절차는 공모를 통해 내정된 인사에 대해 시의회에 청 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10일 이내에 능력 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후 5일 이내에 내정자의 장·단점을 담은 결과자료를 시장에게 보내고, 시장이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해 임명하게 된다. 청문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자료·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배포·유출해서는 안 된다. 청문대상은 8개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확대될수 있도록 상호노력하기로 했다. 첫 인사청문회 대상은 25일까지 공모한 뒤 3월 중순 선임 예정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될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 미래 위해 시·도발전연구원 통합"

광주시장·전남지사·시도의회 의장 나주서 상생 논의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조 영표 광주시의회 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이 25일 만났다. 상생 과제 중 하나인 발 전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낸 이들 은 이날 전격적으로 만나 호남 미래를 위해 광 주·전남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 을 같이했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양 시·도 발전연 구원 통합안건을 시·도의회에 상정한 것과 관 련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시·도의회 의장들은 연구원 통합과 관련한 의회의 분위기를 전달 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호남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며 "통합을 통해 연구 역량을 높이고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과제 를 연구하여 지자체나 의회에 제공하는 역할 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도 이 자리에서 "광주와 전남이 공동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 국전력을 유치했던 상생의 결단을 바탕으로 발 전연구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중국과 의 교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세계사적인 변 화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의 미래비전과 청사진 을 그려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명현관 도의장은 "시·도의회는 광주 와 전남의 상생발전에 대해 추호도 이견이 없 지만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낱낱이 살펴봐 야 한다"라며 "동료 의원들의 뜻을 받들고, 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고민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조영표 시의장도 "면밀히 준비해도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25일 나주의 한 식당에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명 현관 전남도의회 의장과 만나 광주·전남 상생에 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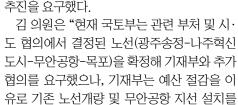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확정 왜 미루나"

김광진 의원 빠른 추진 요구 국회 정치·외교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 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이날 실시된 대 정부질문에서는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 첫 데뷔전을 치렀으며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 개헌 등이 논란이 됐다.

순천출신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 연합·사진)은 이날 이 총리를 상대로 "호남고 속철도 2단계(광주송정~ 목포) 구간은 2020년까지 완공하기로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에서 노선 확정 을 하지 않아 아직 추진조 차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안했다"며 "작년에도 전남도는 노선에 대한 협의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노선 확정을 하 지 않아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400억원의 실시 설계비가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역시 어렵게 확보한 설계비 600 억원이 기재부의 노선 확정 늑장 추진으로 또 다시 불용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박 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5선의 이재오 의원이 첫 질문자로 나서 현 정부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또 6선으로서 국무총리까지 지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도 직후에 발언자로 나서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참여정부 '실세총리'를지낸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같은 충청 출신인 이완구 총리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이 총리는 데뷔전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민감한 현안 질문에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이해찬의원으로부터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